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명성신용협동조합

‘늘 곁에 있는’ 명성신협의 지속가능한 나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따뜻한 손길로 지역에 깊이 뿌리내린 금융기관이 있다.

‘사람 중심의 금융,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묵묵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지역을 돌보고 있는 제천시에 위치한 명성신용협동조합(이하 명성신협)이 그 주인공이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속 금융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고, 지역과 함께 숨 쉬며 성장해온 명성신협은 작지만 단단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 ‘신협 10동 결연 사업’,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손길을 건네는 명성신협.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 ‘늘 곁에 있는 신협’이 되기를 바라는 이들의 진심은 오늘날 조용히 지역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작지만 강한 연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명성신협의 백화천 이시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면접자주)



명성신용협동조합 임·직원 단체사진.

직원 8명의 작은 조직...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힘써 '사람 중심 금융 ·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신념 아래 소외계층 지원

–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신협은 ‘사람 중심의 금융, 더불어 사는 사회’를 공동의 사회적 가치로 두고, 전국 단위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오고 있다.

명성신협 또한 이러한 철학으로, 3대 기본 목표 중 하나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신협’을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됐다.

단순히 조합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이러한 신념 아래 명성신협은 소외계층 지원, 소상공인 후원, 아동 금융교육, 지역 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신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동 공동체를 지향한다.

명성신협 또한 이러한 철학으로 지역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대상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 올바른 경제 개념과 금융 습관을 길러주는 이 프로그램은 지식 전달

에 그치지 않고, 참여 아동이 자립심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협사회공헌재단, 물탄동산지역아동센터 등과 함께 6년째 공동 추진 중이다.

또한 충북 내 신협들과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해 ‘1신협 1아동 결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복한 집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 도배 · 장판 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을 위한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 전통시장과 협력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사업’,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돕는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필요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명성신협은 단발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의 사회공헌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명성신협은 ‘매년 한 번 도움을 주는 신협’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신협’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두고 있다.

잡간의 도움보다 꾸준한 동행이, 눈에 띄는 이벤트보다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원이 지역사회를 더 건

강하고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이에 명성신협은 보다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통해,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려 한다.

이러한 방향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명성신협은 모든 활동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 전후 소감을 나누고, 정기적인 내부 공유, 직원 제안 채택 제도 등을 운영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비록 직원 수는 8명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소수이기에 지역 주민들과 더 밀도 있게 관계를 맺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도 더 깊어졌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쌓인 신뢰는 단기 성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앞으로도 명성신협은 늘 그랬듯, 지속가능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키는 금융기관으로 남고자 한다.



명성신협은 지난해 어부바 멘토링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는지?

지역의 작은 금융기관으로 고객 응대와 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초기에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 손길이 지역을 바꾼다’는 공감대가 점차 조직 내에 자리 잡으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사회공헌이 ‘해야 하나’라는 일에서 ‘기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뀐 것이다. 지금은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의 질도 높아지고 만족감도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명성신협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의 토대가 되었다. 앞으로도 작은 규모지만, 나누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기관보다 크게 품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금융기관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곳곳에 따뜻한 발자국을 남겨왔다. 올해도 명성신협은 기존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더욱 풍성하게 이어갈 계획이며, 새로운 시도도 준비 중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금융 도우미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지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명성신협은 앞으로도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기억에 남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지역이 어려울 때 함께 울고, 변화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든든한 동반자로 남을 것이다.

오늘도 이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기를 바라며, 명성신협은 변함없이 따뜻한 발걸음을 지역을 향해 내딛고 있다.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개소식에 참여한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국 두 번째 규모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개소

기부식품 보관 · 배분 강화... 도내 푸드마켓 지원체계 구축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는 12일 기부식품 등을 보관 · 배분하는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가 청주시 강내면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상식 충북도의원,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 · 기초 푸드뱅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식품과 생활 용품을 기부받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사회복지 사업이다.

충북광역푸드뱅크는 최근 3년간 평균 기부식품 지원 규모 전국 3위, 2024년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전국 2위 등의 성과를 거둬 전국적으로 우수 운영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관창고는 34.44㎡ 규모로 전국 17개 시 · 도 중 가장 작은 수

준이었고, 상 · 하차 공간이 협소해 대량이거나 긴급한 기부 물품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물류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 단위의 기부 물품 모집 · 조정 · 배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기능하게 된다. 아울러 도내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에도 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물류센터는 경부 · 중부고속도로 청주IC와 서청주IC 인근에 위치해 대형 화물차량의 진 · 출입이 용이하며, 총면적 803㎡ 규모로 전국에서는 인천 광역푸드뱅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설이다.

유응모 회장은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개소를 계기로 기부 물품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청소년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시행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지도자 처우개선 본격 추진

충북도는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6월부터 ‘청소년 지도자 대우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기본법과 충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도는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을 비롯한 11개 시 · 군 45개 청소년 시설의 종사자 총 314명을 대상으로 대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기본 처우개선에 더해 경력에 따라 월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기존 단일 지급 방식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경력 보상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3년 미만 3만원, 3~7년 미만 4만원, 7년 이상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기간계약직 등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이다. 청소년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리사, 운전원 등도 포함된다. 다만 비상근 종사자, 공모사업 수행자, 파견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총 1억 890만원 규모(도비 40% · 시군비 60%)로 책정됐다. 도는 4월부터 소급해 6월중 1차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7월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추경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발송횟수: 주 3회(문자서비스)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신청기간: 상시접수



문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최중증 발달장애 서비스 만족도 ‘최상’

보건복지부, 시행 첫해 만족도 조사 결과 93.8점
‘돌봄부담 완화’·‘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변화

보건복지부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진행된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1개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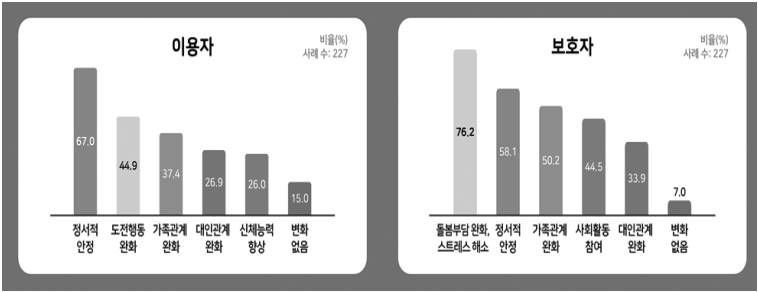
상 이용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총 304가구, 608명)이며, 조사는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방법은 우편 및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항목은 서비스 만족도, 효과, 개선사항 등이었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



만족도 주요 결과(서비스 이용 후 변화).

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서적 안정’(58.1%), ‘가족관계 개선’(50.2%)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의 변화는 ‘정서적 안정’이 67.0%로 가장 높았고, ‘도전행동 완화’(44.9%), ‘가족관계 개선’(37.4%)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속 의향’에 대해서는 보호자 97.7점, 이용자 97.7점, ‘주변에 서비스 추천 의향’은 보호자 9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이용 시간 연장 등 탄력적 운영,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중앙장애인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공유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장애인 탄 택시·업무차량도 전용주차 허용 권고’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 ‘사람 중심’ 권고
발급자격 상실 시 반납 의무화 등 부당 사용 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보행상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가족 명의로 등록된 1대에 한해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어, 택시나 공유차량을 이용할 경우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차량 미보유 장애인의 이동권

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미국,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행상 장애인이 휴대 가능한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업무용 차량 사용이나 공공시설 주차 시에도 주차표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발급 대상 확대를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장애인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용주차구역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주차표지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보행상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되었는데도 장애인 가족 등이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당하

게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차표지 반납 의무를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경우 주차표지에 유효기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시설 폐쇄나 자동차 소유주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주차표지 부당 사용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 주차표지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

현장방문 확대·AI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 강화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는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 1300여 명(7.2%)으로, 이 가운데 독거가구는 2만 4300여 명(취약계층의 58.9%)

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 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위기가 심화하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집중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기간 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가구 등 현장 방문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냉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수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정보 50종을 활용해 위기 의심가구 발굴을 병행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어서, 상이 국가유공자(1~3급)와 독립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 등에게는 폭염 대비 공공요금 감면(전기요금 월 2만원 한도)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지원한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주택·재산피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피해별 최대 5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외부 활동 감소에 따른 사회적 고립 위험 심화에 따라 홀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과 협업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계절 구분 없이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 7000원으로 세대원 수(1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돼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폭염 일수 증가로 인해 냉방에너지 사용량

이 증가할 경우 사용자는 총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선택권과 자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9~18세 대상 3년에 1회... 인증 시 1만원 상당 경품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건강검

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데, 행사 기간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하다.

한편 여가부는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꿈드림센터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홍보한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내년 3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해당 법률의 위임사항과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심한 장애인이 주 대상이며, 지자체 협의를 거쳐 다른 대상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 등 기관을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은 이들 기관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별 지원계획을 수립·심의하고, 지역 전문가와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서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판정 결과, 서비스 요구 변화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전산시스템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문인력 교육은 보건복지인재원이 맡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사람에 웃고, 이웃에 살며, 함께 성장한 1년'을 주제로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애인 자립 돕는 ‘옥천군장애인복지관’

개관 1주년... 회원 500명 · 일 평균 이용자 180여 명
인식 개선 문화활동 · 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 서비스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명규)은 5일 복지관 5층 강당에서 '사람에 웃고, 이웃에 살며, 함께 성장한 1년'을 주제로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황규철 옥천군수를 비롯해 지역사회 인사,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옥천 군수의 축사, 1주년 기념 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관은 지난 1년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먼 지역까지 확대된 셔틀 운행과 특장차량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인식개선 인형극·영화제·공모전 등 문화활동, 반다비체육센터와 연계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군민들에게 제공했다. 현재 복지관 등록 회원은 약 500명이며 일일 평균 이용자는 180명에 이른다. 또한, 2023

년 16억 4000만원이던 예산은 2025년 20억 1000만원으로 확대되며 행정·재정적 기반도 한층 안정화됐다. 특히 복지관의 1년을 사계절의 흐름에 담아낸 인문적 기록인 기념 책자 '사계애 담다'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목원대 김동기 교수의 기초 강연과 함께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정찬영 관장, 충북장애인부모연대 홍현진 옥천군지회장의 패널 발표가 이어졌으며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했다. 황명규 관장은 "1년 전, 옥천군

과 주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 출발한 복지관이 이제는 지역 장애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언제나, 함께'라는 원칙 아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는 복지관으로 성장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에 문을 연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전국 최초로 반다비체육센터와 통합 건립되며 주목을 받았으며 복지·건강·여가·자립이 어우러진 융합형 공간으로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를 실현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 우리충북,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충북모금회, 취약계층 여름나기 캠페인 출범식

내달 15일까지 냉방용품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13

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5 우리충북,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7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 폭염에 취약한 도내 저소득가구 및 독거노인, 에너지 취약계층 등 4760세대를 대상

으로 5억 3000만원 규모의 냉방용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출범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이양성 충북도의회장,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유응모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이장희 충북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해 착착착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충북모금회 홈페이지(cb.chest.or.kr)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모금회 '2025우리충북,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성금계좌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RS 060-702-1004(한통에 2000원)를 통해서도 기부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다하, 'KCCI-Forbes' 사회공헌 대상

40년간 장애인 복지 헌신
제천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다하'가 '2025 KCCI-Forbes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다하는 1985년 설립 이후 40년간 장애인 복지 분야에 헌신해 왔으며, 지적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세하의집, 이하의집, 사하의집을 비롯해, 단기 보호시설 세하단기이용센터, 직업재활시설 세하엔, 지역사회 기반 다하주간이용센터, 특수학교 청암학교 등 총 7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보호, 교육, 자립을 전 생애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다하의 핵심 철학인 '다양성의 조화'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주배경 주민 지원, 치유농업, 복지일자리,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사회 복지 전반에 기여하고 있다. 장병호 설립이사는 "세하의

집을 시작으로, 장애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자 청암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40년간 지속해온 사회공헌과 통합복지 실천에 대한 평가로, 사회복지법인 다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장애인복지를 넘어선 사회복지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청주홍덕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자 '소중한 당신을 위한 풍성한 하루' 행사를 개최했다.

청주홍덕시니어클럽 “하루를 풍성하고 활기차게”

노인 자립·사회 참여 지원

청주홍덕시니어클럽(관장 정미정)은 13일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자 '소중한 당신을 위한 풍성한 하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청주홍덕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공익활동 11개 사업단에 소속된 1141명의 어르신이 1, 2부에 나눠 각각 500여 명이 참여한 가

운데 2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마련된 봉명어린이집 아이들의 특별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 콘서트, 시니어 콘서트 등 풍성한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주홍덕시니어클럽 중창단과 더 클래식 전문 연주자들이 참여해 공연의 수준을 높였다. 또한, 행사장 로비에서는 노인 일자리 공모전 작품 전시회가 열

려 어르신들 및 아이들의 열정과 재능을 엿볼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아이들의 공연을 보며 손자·손녀가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졌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 다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활력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미정 관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개인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도내 홀몸 어르신께 반려로봇 114대 전달

챗GPT 기능 탑재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이영민)는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기)가 후원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가 주관하는 '2025년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AI 반려로봇'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AI 반려로봇을 보급하여, 일상 속 즐거움을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관제 시스템을 통해 긴급구호를 지원하는 스마트 돌봄 사업이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충북도내에는 총 114대가 보급된다. 해당 로봇은 도내 15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지원 대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보급되는 반려로봇에는 챗GPT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일상 대화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 체조 및 노래 등 활동 독려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는 2025년 새마을금고와 함께 하는 AI반려로봇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살려줘 효돌아"라고 외칠 경우,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어 119 긴급구호 요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천·음성·증평·괴산지역 새마을금고 협의회장 겸 음성 비석새마을금고 이사장인 박광서 회장을 비롯해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광서 회장은 "반려로봇 보급을 통해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긴급 상황 대응이 가능해져, 선제적인 스마트 돌봄 실현의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부터 지역 새마을금고와 함께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려로봇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1인 1책 펴내기 원고 공모

내달 14~28일 접수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나만의 소중한 책 만들기' 출판원고를 오는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이 사업은 올해 19회째를 맞은 이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直指)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청주시가 주최하

고 세계직지문화협회(회장 김성수)가 주관한다. 원고 공모는 자서전을 필두로 소설, 그림동화, 만화, 포토북, 기행문, 서간문, 수상록, 목상록 등 자신만의 다양한 기록이 대상이다. 단, 수필과 시는 접수 원고에서 제외되며 등단 문인을 제외한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원고 분량은 자서전·소설·동화 등은 A4용지 70쪽 이상(글자크기 11포인트), 그림동화·만화는 40쪽 이상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출판신청서, 원고, 반명함판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세계직지문화협회 사무국(청주시 흥덕구 흥덕로88번길 3 구루물아지트 2층)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이재명 정부 공약 ‘5대 강국을 향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세계를 향한 ‘5대 강국’ 도전
복지·경제·문화·안보·민주주의 아우른 통합 개혁안

“국가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 아래, 이재명 정부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과 함께 대한민국을 복지·경제기술·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 분야의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전략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전담기구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주 4.5일제와 연공서열형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돌봄 강화, 주거·의료·교육의 공공성 확충, 응급부터 일차의료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공공의료망 구축 등의 계획이 담겼다.

동시에 AI·바이오·에너지 고속도로 투자 등으로 경제·기술 강국 기반을 다지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균형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강국의 틀을 마련한다. 또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 인문 기반 문화예술 진흥으로 문화 강국의 지평을 넓히고, 검찰·계엄 개혁과 디지털 공문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주권이 살아 있는 민주주의 강국으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실용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지켜야 할 약속이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생활고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 실현에 나선다.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각 분야의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외에도 민·관 협력으로 재정 부담은 낮추고 정책 효과는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 **기본사회와 돌봄 국가 책임제**

기본사회의 방향은 정방위적이다. 일단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촘촘히 구축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계어려(가죽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 특성별 소득지원,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력 등도 약속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에 대해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서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 사회’를 약속했다.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주택에도 기본사회의 개념을 적용해 수요자 중심의 폭 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비 지원과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 등을 약속했다.

■ **의료 공공성 강화**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설립,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의료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한다. 국립대병원에는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진료권 단위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함께 확장한다.

또한, 응급의료체제도 개편한다. 이송부터 전원까지 이어지는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중증·응급질환에 24시간 전문의가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한다.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방문진료와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제정에 대해서는 안정적 국고지원과 수가보상체계 개편을 명시했다. 대상별·질량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와 함께 회귀·난치질환 및 소아비만·소아당뇨 등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문화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추진**

주 4.5일제를 추진해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과로사를 예방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포괄임금제는 노동계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제도이다.

현행법상 아근이나 휴일 근무 시 추가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줘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이를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무 시간 외 ‘연결되지 않은 권리’를 보장해 저녁 있는 삶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도 내놔다.

또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 등과 논의를 거친 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황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문화 강국’

■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을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 5’로 거듭나게 만든다.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원 규모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징어 게임’, ‘폭작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문화 예술을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같은 문화예술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 기준 우리 문화 재정은 국가 총 지출의 1.33%에 불과하여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K-푸드, 뷰티, 팝, 드라마, 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콘텐츠 불법 유통을 단호히 차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로 대응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 **문화예술 인재 양성, 창작공간과 비용 등 지원 강화**

K-콘텐츠 창작 전반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한다. K-컬처 플랫폼 육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이 국내 플랫폼을 육성해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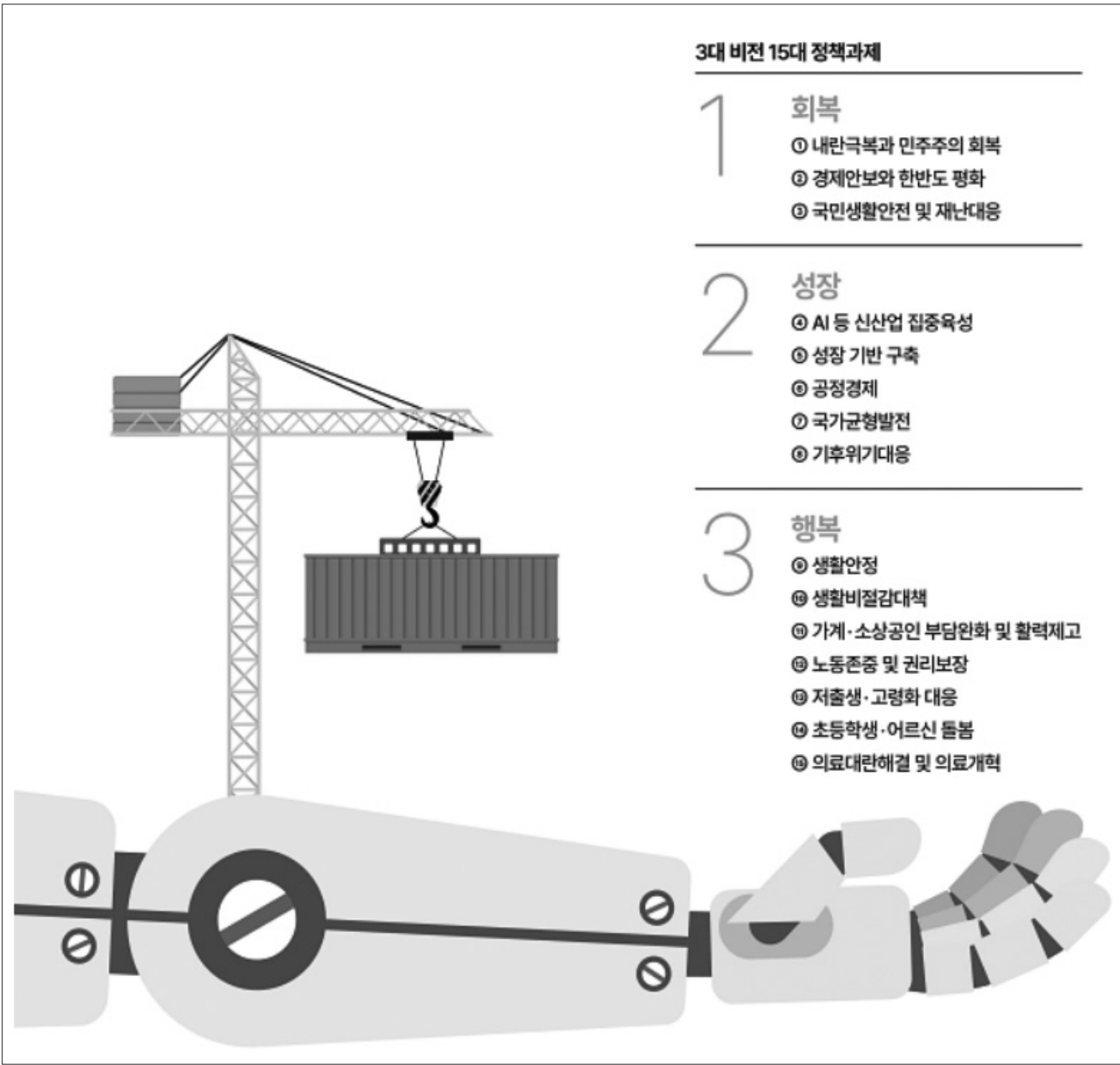
또한 최첨단 스튜디오와 같은 K-콘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문화예술 분야 연구개발(R&D)·정책금융·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배급·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 보장을 확대하며,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를 확장해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문화예술 인재 양성고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을 추진한다.



■ **인문학 지원 확대, 전 국민 인문교육 활성화 추진**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 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기로 했다.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 과정 내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청소년 인문학 캠프, 독서토론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학에도 다양한 인문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인문과 인공지능(AI), 환경, 공공정책 등을 융합한 교양과목을 확대한다.

인문학 전공 인재를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도 지원한다.

3. 통합·상생 가치 실현하는 ‘민주주의 강국’

■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을 완수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먼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국가형법원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을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함께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 **불법계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불법계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도 마련한다.

계엄법을 개정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한다.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엄 시 국회 활동 방해 금지 및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권도 축소한다.

또한, 불법계엄 사태의 중심이 됐던 군과 정보기관 개혁에 나선다. 불법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를 재편하고 경호처의 지원 인력을 줄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경호처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를 추진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의제별 공문화위원회’ 구성 계획도 밝혔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국정에 주권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으며,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투표를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도입한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5극 3특’ 중심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산업·행정·교육·교통 등 거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나선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임기 내 추진해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를 완성할 것이며, 수도권에 남아 있는 200여개의 공공기관을 2차로 지방에 이전하고 이전 기관과 직원들에게 법인세·상속세 감면, 기본주책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센터 설립, 대기업 유치, 인재 양성에 나선다.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간 접근성과 연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머물 수 있도록 지방대학 혁신체제, 공유대학·연합대학 도입,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4. K-이니셔티브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서해의 풍력발전과 호남의 태양광 발전을 주요 산업지대로 보낼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2040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U자형으로 아우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산업단지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대한민국이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로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이다.

5. 세계질서 변화에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외교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간 경제, 군사, 첨단 과학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강화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역제능력을 확보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

한편,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일본과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략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과는 무역 및 안보 이슈를 염두에 둔 안정적 관계 관리를, 러시아와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제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공감〉

복지광장



임 영 아

다온빌 사무국장

지난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되었다.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제2조제2항에서 "지역사회 자립"이란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지

장애인거주시설, 입주자의 독립된 삶의 터전

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따르자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32조제1항 주거 전환 지원에 따르면 '거주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거주시설 생활이 지역사회 자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동시에 시설에 입주한 장애인의 주거 공간으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목적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이바지하지 못한다고 단언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사업 탐구 도서인 『복지요결』(한덕연 저) 시설 사회사업편에서는 '시설은 주거시설과 지원 기관의 결합체로 주거 시설로써는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려고 사회가 마련

하여 제공하는 주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지원 기관으로써는 시설 주택의 입주자를 전담하여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시설은 입주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이자 지역사회생활을 돕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의 저자가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온빌(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역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30명의 입주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설 내에서 일상적인 도움을 받으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입주자들은 저마다의 희망계획 필요에 따라 내수, 북이, 증평 지역에 있는 교회 등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민자치센터, 동호회 등에서 다양한 취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입주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있다면, 단지 '시설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전환의 대상이 되거나, 지역사회 자립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며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말하는 '지역사회 자립'에서 굳이 거주시설을 배제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제4조제1항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 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자는 바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도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주거 형태로서 인정받아 마땅하다.

물론, 아직 일부 시설에서는 집단생활 위주의 운영과 내부 중심 활동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그러한 모습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서 거주시설을 자립의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배척이나 배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은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기관과 소통하며, 제도적 기준에 맞게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이며,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길이다.

부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전한 "장애인의 거주지로서 시설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절실한 요청이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보다 다양한 현실의 목소리를 담아, 포용과 균형의 방향으로 재정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복지칼럼

죄 없는 미래세대 위해 에어컨과 거리두기



최 은 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지구온난화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화(熱化) 시대가 도래했다. 추운 겨울, 화사한 봄을 기다리지만, 봄은 사라진 듯하고 우리는 작년에도 견디기 힘들었던 여름을 지나고 있다.

방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을 몰고 와 요란하게 폭우를 퍼붓고,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햇살을 내비친다. 이런 기후 변화를 혹자는 '상수'라고 한다.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증가한 온실가스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오래 접한 탓인지 어느새 위험성에 대해서는 둔감해졌다. 더구나 텃밭에도 잘 사용하고, 분리수거도 실천한다는 안도감에 일상 속 더 근본적인 행동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결 것이라며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우리에게, 폭염은 잔혹하게 생명을 빼앗아가며 온실가스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한다. 2024년 발간된 '폭염살인(The heat will kill you first)'에서 저자 제프 구델은 여름철 필수품이자 온실가스의 주범인 에어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에어컨은 다분히 미국적인 안락함의 상징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타인과 다른 중, 그리고 주변 세상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 될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리하여 안락한 생활은 클릭 한 번으로 미래를 점점 망가뜨린다. 도시에는 낡고 비효율적인 창문형 에어컨이 모든 건물에 매달린 채 실내의 열기를 빨아들여 바깥의 길거리로 내뿜는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에어컨은 절대 냉방 기술이 아니다. 에어컨은 단순히 열기의 위치를 바꿔주는 도구일 뿐이다"

지극히 평범한 단어들로 연결된 지 사실만 나열한 에어컨의 역설적인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점심

을 먹기 위해 걸던 여름날 도시의 뒷골목, 실외기의 후끈하고 불쾌한 열기가 실제 나를 덮치는 느낌마저 들었다. 건물 뒤 실외기도, 천장 위 빌트인 되어 있는 에어컨도 잘못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1955년부터 주택에 기본사양으로 장착된 이후, 편리함에 중독되고 유해가스를 아낌없이 사용한 인간에게 있을 뿐이다.

에어컨과 냉장고,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했다. 이후 국제적 규제로 사용이 줄어들면서 오존층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대체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는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고 1만 4000배에 달하여 역시나 완벽한 대체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싸움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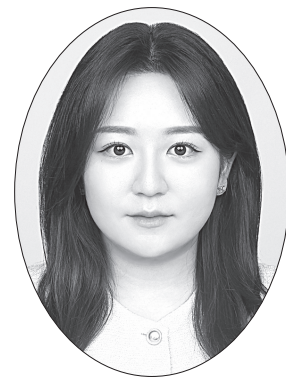
환경을 외면한 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 환경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저(低) GWP 제품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 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고 한다. '기후'와 '에너지'라는 조합에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이 집중되기를 기대한다. 그 결과, 편하게 숨 쉬고 햇빛을 걱정 없이 쬌 수 있는 자연환경이 조성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일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와 현재 세대가 아닌, 지구를 뜨겁게 하는 데 아무런 책임도 없는 미래세대가 지금 우리가 '폭염'이라고 부르는 이 날씨를 '일상'이라 부르며 살게 된다는 점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들이 더 가혹한 세상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프 구델이 만난 파리의 시의원, 알렉산드르 플로랑탱의 말을 빌려 되뇌어본다. "통째로 구워질 것인가, 도마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미래세대를 위해,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면 좋겠다. 나는 죄 없는 미래세대를 위해, 오늘날이라도 에어컨과 서먹하게 지내보려 한다. 부채 하나 들고, 기후 관련 책을 읽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것도 나름 방법일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신 유 리

단양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나는 강원도 홍천에서 나고 자랐다. 단양은 나에게 낯선 곳이었지만, 이곳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어려움'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홍천 역시 농촌 지역이지만, 인구 규모나 고령화 속도를 비교하면 단양은 더 작은 규모 속에서 훨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내가 입사하던 2024년 2월 말, 단양군의 총인구는 약 2만 7000명에 불과했으며, 그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무려 36.69%에 달했다(2024. 2. 29. 기준).

복지 사각지대가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단

양의 봄날, 단양노인복지관의 문을 두드렸다.

입사 초기에는 평생교육, 노인 권익증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맡았고, 현재는 취미·여가지원사업과 기획홍보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아실현을 돕는 이 과정은 '복지 실천의 핵심'이라 느껴진다.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고, 배움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여정. 그래서 나는 평생교육을 '현장을 살아 숨 쉬게 하는 따뜻한 실천'이라 믿는다.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한국화 교실의 아와학습'이다. 이 수업은 최고령자가 1931년생(만 94세)일 정도로 평균 연령이 높지만, 상·하반기 두 차례 야외로 나가 실제 자연을 마주하고,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 같은 풍경을 그려도 그림마다 색과 결이 모두 다르다. 각자의 삶과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기 때문이다.

한 장의 그림에는 살아온 세월의 결이 담겨 있고,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표현되는 선 하나, 색 하나마다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이 수업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넘어,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

었다. 나 역시 그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활동은 '오키나와 교실'이다. 2024년 하반기에 개설되어 약 3개월간 연습한 끝에 어르신들은 발표회 무대에 올랐다.

처음에는 한 음조차 내기 어려웠었던 분들이, 연주를 마친 후 "이 나이에 배우면 다 된다"며 뿌듯해하시는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첫 수업에서 "부끄러워서 잘 못 했겠어요", "틀리면 어쨌죠?"라며 조심스레 걱정하던 어르신들께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라고 응원했던 순간도 떠오른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한 곡을 완성하고, 춤을 추며 당당하게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느꼈다.

물론 농촌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교통 제약, 전문 인력 부족,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이 어르신들의 정서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하며, 그 가치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특히 기억에 남는 변화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무용' 프로그램에서 나타났다. 무뚝뚝하고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한 어르신께서 점차 감정을 표현하고, 동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변해

가셨다.

수업 중 갈등이 있던 날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모습은, 무용이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단양에서 지내며 내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내시기도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외로움과 상처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기에 더욱 이해하며 다가가려 노력한다.

단양의 봄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히 피어나는 배움의 순간들. 그 결에서 함께하며, 나는 오늘도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미를 되새긴다.

앞으로도 단양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어르신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복지를 실천하며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함을 더하고 싶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속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배움의 자리에서 함께 웃고, 실패도 겪으며 어르신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결을 지기는 존재가 되고 싶다. 사회복지사의 길은 늘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이라 느낀다.

내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기쁨과 변화를 더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70-7198-4159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